

햇갈리는 코로나 방역기준...업주들 불만 표출·시민은 불안

고위험시설 방문판매업소는 집합 '금지'·클럽은 집합 '제한'
다중이용시설 PC방·찜질방·스터디 카페 기준 제각각
검체 채취 기준 놓고도 혼선 잇따라...일관된 원칙 적용해야

“고깃집엔 사람이 넘쳐 나는데 왜 우리 (감성주점)만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점검 받고 손님들 귀찮게 해야 하나. 기준이 뭐니까”, “같은 고위험시설인데도, 왜 클럽은 집합 '제한'이고 방문판매홍보관은 집합 '금지'입니까”, “왜 수영장은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인데 위험시설에서 제외합니까”

광주시가 방역지침을 마련하면서 원칙과 기준이 맞지 않아 지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위험시설로 지정해놓고도 모임을

금지하는 곳과 이용을 제한하는 곳이 다른가 하면, 아예 위험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도 적지 않다.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감성주점 운영자 A씨는 “코로나로 가뜰이나 장사가 안되는 데, 감성주점이라는 이유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손님 받기도 힘들다”며 “술집보다 찾는 손님이 훨씬 많은 고깃집, 식당이 얼마나 많냐. 왜 거기는 제외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A씨가 운영하는 감성주점의 경우 광주시 등 방역당국이 지정된 고위험시설이다. 출입자들을 위한 QR(전자출입명부)

코드 설치와, 발열체크는 기본이다. 50인 이상 한 대 모이는 것도 제한된다.

반면, 많은 손님들로 북적대는 한우 고깃집, 피자·파스타·돈가스집 등은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다. 왜 이렇까.

광주시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22개 업종 5690개다.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지정한 11개 업종(방문판매 등 홍보관·유통물류센터·뷰페·유희주점(클럽, 토크홀 등)·헌팅포차·감성주점·실내집단운동·실내 입석 공연장·콜라텍·단란주점·유통물류센터) 이외에 PC방, 학원, 종교시설, 지하에 입점한 게임장, 오락실, 공연장, 실내체육관, 멀티방, DVD방, 목욕탕, 사우나, 장례식장 등을 추가했다.

하지만 고위험시설보다 인파가 북비는 음식점과 카페 등을 제외하면서 해당 업주들의 불만이 나온다.

차평동에서 PC방을 운영중인 B씨도

“중대본은 게임 행위를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은 시설로 분류했는데, 광주시는 PC방에 대해 고위험시설로 지정해놓았다”며 “그러면서도 비슷한 형태의 독서실은 왜 고위험시설에서 빼느냐”고 말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최근 ‘일상생활 활동별 코로나19 위험도’를 발표하면서 게임과 독서·공부의 경우 낮은 위험도의 행위로 분류했다.

물놀이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게 중대본 판단이다. 정작, 광주시는 그러나 지역 실내 수영장에 대해서는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방문판매업체와 클럽에 대한 기준도 다르다.

광주시는 방문판매홍보관의 경우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감염 확산을 우려한 조치로, 이미 방문판매홍보관을 통한 확진자가 발생한 점이 반영됐

다. 하지만 클럽은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데도, 가급적 모이는 것을 자제하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 부경찰은 21일 상무지구 클럽에서 60명이 모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업주와 모임을 추진한 주민만 입건했을 뿐이다. 지난 15일 상무지구 방문판매홍보관에 모인 60명을 전원, 입건했던 사례와도 다르다.

광주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업종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여태껏 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았던 수영장도 확진자가 다녀가더라도 했다면 고위험시설로 지정된다는 얘기가.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방역수칙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세부 방역수칙, 고위험시설 지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모든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면 상인들도 힘들고 관리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며 “확진자가 발생했던 업종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검체 채취 기준을 놓고도 혼선이 나온다. 직장인 김모(54)씨는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을 이용한 뒤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를 요구했지만 확진자가 다녀간 후 반나절이 지나 감염 우려가 없다며 거절당했다. 김씨는 사설 병원에서 15만원을 주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대신, 하루 휴가를 내고 집안에 머물렀다.

식당의 경우 확진자와 동시공간대 머문 것으로 확인되거나 확진자 방문 후 3시간 이내에 방문한 이용객에 대해서만 검체 채취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는 게 보건당국 설명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개소 앞두고 철저한 방역소독 22일 광주시 북구 첨단2지구 신원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에서 건축동행복지센터 직원들과 생활방역반원들이 개소(27일)를 앞두고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15개월만에 日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소송 시작

미쓰비시측 소송대리인 선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상대로 한 소송이 15개월 만에 시작된다. 2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측은 최근 담당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이기리)에 피고 측 소송대리인(변호인)을 선임해 위임장을 제출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측은 지난해 4월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된 이후 4차례 이뤄진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전혀 응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소송 서류가 일본측의 비협조로 해당 기업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데 따라 공식 송달 절차를 밟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소송 대리인이 없더라도 원고측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불이익을 우려한 미쓰비시측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재판에 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재판은 23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3호에서 열린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노사 합의했어도 법상 통상임금에 포함 댄 상여금 지급”

법원, 광주기독병원에 7억9000만원 지급 판결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22일 광주기독병원 직원 471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병원측은 7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병원측 항소를 기각했다. 직원들은 병원 측이 정근수당, 봉급조정수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미지급분 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병원 노사는 앞서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 범위에 정근·봉급조정수당, 정기상여금 제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관련 수당이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병원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병원의 의료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해마다 52.3~54.2% 수준으로,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존립이 위태롭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두차례 실종 신고·자살예방센터 상담까지 받았는데...

광주시 공무원 극단적 선택 막아 고위험군 돌봄 시스템 보완해야

가족들의 두 차례 자살 의심 실종신고와 자살예방센터 상담까지 이뤄졌음에도,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했다.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취약자들에게 대한 적극적인 심리·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광주북부경찰과 광주시 자살예방센터 등에 따르면 광주시 공무원 A씨가 이날 오전 7시에 광주시 북구 모텔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의 극단적 선택을 우려하는 실종 신고를 접수받았지만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지역을 밤새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에도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받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위치를 파악, 자살예방센터 상담을 받도록 조치했었다. A씨는 당시 광주 자살예방센터 상담사와 50여분 간의 상담을 거친

뒤, 다음날 가족들과 정신의학과를 방문할 것이라는 대답을 하고 귀가했었다. 광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는 소방·경찰과 3차 통화시스템을 갖추고 현장 동시출동 등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담요원을 배치, 24시간 자살위기 상담을 진행해왔다. 센터측은 자살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자살 고위험계층으로 지정, 심리 상담 등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 의료시설**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 공 장**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 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 공 장**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 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